

韓, '당정관계 개선·당내 갈등·리스크 관리' 등 과제 산적

‘총선백서’ 韓 책임 관련 분열 전망
野, 방송4법·채상병 특검 추진
이탈표 최소화에 당력 집중해야
尹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의 인사를 받고 있다. 결과는 한동훈 후보 당대표 당선.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으나, 그에게 놓여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 대표의 우선 과제는 ‘총선 중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악화된 대통령실과 관계를 푸는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정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후보들간 네거티브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도 떠안았다.

특히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한 대표 사이 공방은 지지자들에게 옮겨가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몸싸움이 일어나 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 후보가 제기한 ‘3대 의혹’도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복기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총

선백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백서에 한 대표의 책임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이를 놓고 당장 당 안팎으로 분열 양상이 도드라질 예정이다. 총선백서는 전당대회부터 친윤석열계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한 후보가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입법 추진 시도를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거대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

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산업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담긴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를 노리고 있어, 한 후보는 당장 대야투쟁의 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안’도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한 후보는 이탈표 최소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쟁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거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여권을 향한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한동훈 특검법’에 ‘여론조사팀 운영’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누적 득표율 91.7%... “‘尹 정권 조기종식’ 당심 반영”

이재명, 野 전대 당 대표 경선 독주
김두관·김지수 경쟁력 부족 지적
李, 당 밖에서도 지지기반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일찌감치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또대명(또 한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같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데에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0%다. 이는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합산한 수치로, 2022년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종 득표율이었던 77.77%는 진작 넘어섰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본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또대명’ 기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날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에 대해 “(민주당이) 당심을 모을 수 있는 당원 참여 시스템들을 정비해 왔고,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두서는 안 된다’는 당심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 등의 당심이 이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서 이 후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당심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원들의 의지나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이후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對) 정부 투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평론가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도 지적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당내 경선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계파나 세력을 대변하지 않고, 김지수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분이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 김두관·김지수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대해 “90%까지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본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80%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의원은 이 후보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현재 탄핵 청문회나 검사 탄핵이나 정치적 이슈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만 집중돼 있으면 안 되고, 민생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내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 국민적으로는 중도 민심을 끌어내는 행보 등 리더십을 폭넓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는 넓은 리더십으로 작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尹, 체코 ‘원전특사’로 성태윤·안덕근 파견

(정책실장) (산업부 장관)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다. 최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

코 총리, 요셉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진서를 전한다”며 특사단이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전날(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사단은 성태윤 실장과 안덕근 장관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후 체코로 출발 예정이다. 특사단장은 성 실장이다. 피알라 총리와 특사단이 면담할 시에는 특사단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실무진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에 정책실장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단장으로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으로,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안전교육 확대

국적·비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